

## 광화문광장의 비판적 성찰

하상복  
목포대학교

### 〈논문요약〉

이 연구는 광화문광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해 여가와 문화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시절 시민들을 위한 광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움직임은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은 광장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소통과 참여의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광장의 기능적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 문제는 여가와 문화의 장소로 요약되는 광화문광장의 이면에는 권력의 새로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원형과 현대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광화문광장은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의사소통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 정치행위의 공간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광화문광장에 민주적 개방성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주요어: 광화문광장, 개방성, 정치권력, 문화, 의사소통, 참여

## 1. 들어가는 말

광장은 ‘열린 공간(廣場, open space)’이다.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장소임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광장은 자유로움과 평등함을 바탕으로 집단성이 구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광장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올 수 있었다. 때로는 시장이 되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집단적 공간이 되어 왔으며, 때로는 인간적 친밀성과 익명성이 교차하는 중간지점으로서 사람들의 교류와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회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광장의 정치적 기능은 특별히 주목을 요한다. 왜냐하면 광장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역설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장의 집단적 개방성은 어떤 때에는 정치권력에 의한 여론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회합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장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정치적 동원뿐만이 아니라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에도 매우 커다란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절대주의 정치체제로부터 근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이르는 서구의 정치사는 광장의 이러한 모순적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5세가 건립한, 군주의 능륜한 기마상을 중심으로 건립된 ‘루이 15세 광장’은 백성들로부터 정치적 권위와 위엄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혁명의 주요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광장의 이러한 대립적인 정치적 기능성은 서구적인 양상만은 아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권력의 정당성을 연출하기 위해 건립된 중국의 천안문 광장이었지만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정치적 저항의 공간이기도 하지 않았는가. 하버마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정치적 차원에서 광장은 권력의 과시적

공공성의 공간임과 동시에 시민적 여론이 조성되는 공론장이기도 한 것이다(하버마스 2004).

한국에서는 1960년대의 근대화과정과 맞물려 광장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광장은 처음부터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에 지배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건립된 '5·16 광장'을 언급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도시 구조 개편을 위한 사업으로 여의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너비 280m, 길이 1,350m, 면적 11만1천 평의 거대한 광장이 조성되었다(안창모 2005a, 426-428).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광장은 철저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이었다. 군부쿠데타의 정당성을 옹변하기 위한 장소로 조성되어 이후에는 반공시위와 같은 대규모의 정치적 동원이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었다. 또한 1980년대 초반에도, 정부가 기획한 '국풍 8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광장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소비를 강제함으로써 친정부적 여론과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주도해 내고자 했던 통치권력의 이해관계가 관철된 무대였다. 반면에 여의도의 광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표출하는 민주주의 공간 또는 자유로움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참된 시민적 결속과 통합의 공간이 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위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광장은 권력의 독점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한국에서 광장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서구적 의미의 광장은 아닌 것이다. 만쿠조(Mancuso 2009)가 대표 집필한 『광장』은 서구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현재적 사례들을 통해 광장이 시장, 문화예술, 정치(이데올로기), 종교의례, 군중집회 등 포괄적인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해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만쿠조 2009).<sup>1)</sup> 반면에 한국의

---

1) 고대 그리스 도시 광장에 대한 다음의 묘사는 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기능들이 수행되는 서구적 특징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격자구성의 중심에 아고라가 있었다. 아고라는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여러 사회활동들이

광장은 다분히 권력성의 과잉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치적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배타성—광장의 개방성을 권력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배타성—은 광장의 또 다른 개방성, 즉 자유로운 회합을 통해 공공의 관심사를 도모해가는 민주적 개방성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억압되었던 시민적, 민주적 광장의 욕구는 캠퍼스에서 다양한 명칭을 갖는 광장(삼민광장, 아크로 폴리스광장 등)을 무대로 하는 정치토론, 회합, 의례의 과정으로 표출되곤 했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들은 욕구의 억압에 대한 대리만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국민들은 온전한 형식과 의미를 갖춘 광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 청계천광장과 시청 앞의 서울광장이 건립되었고 최근, 2009년 8월 1일에는 광화문광장이 완공되어 개방되었다. 어떻게 보면 광장의 유행이라고도 볼릴 법한 새로운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

영위되던 일종의 광장이었다. 아고라에서는 상거래나 메달주조와 같은 경제행위, 공예작업과 같은 생산행위,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집회, 무기보관과 같은 군사행위, 제식이나 장례나 매장과 같은 종교집회, 재판이나 형 집행과 같은 법률행위, 공연이나 토론과 같은 학문 예술 활동, 문서보관과 도서와 같은 학술 활동, 경주나 운동 같은 스포츠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궁중목욕탕과 호텔이 있기도 했으며 우물이나 호수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임석재 2003, 166-167).

논의를 좀 더 확장하자면, 동양에서 광장은 서구와 같이 포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지닌 공간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회적 기능들이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를 광장으로 부른다면 그러한 의미의 광장은 오랫동안 동양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동양에서 광장은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도시 구성의 공간적 원리에 관한 동서양의 차이에서 연유할 것이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가 도시민들의 정치경제적 삶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기능성)으로 도시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고대 중국에서는 기능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원리에 맞추어 도시를 만들었다. 주나라 이후 고대 중국에서 도시 건립의 전범을 제공해왔던 『주례(周禮)』는 정치, 종교, 경제, 문화적 기능들이 광장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들이 상징적 방위에 맞게 왕궁을 중심으로 분할되는 방식으로 도시가 구성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주례 2002; 賀業鉅 1995).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위계와 질서의 표상이었다. 이러한 공간 구조 속에서 왕궁 정문을 배경으로 펼쳐진 넓은 공간이 광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광장은 서구와는 달리 정치적 의미와 기능으로 채워진 곳이었다.

그 광장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다. 그곳은 인간적 친밀성과 익명성이 적절히 교차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건립된 서울의 광장들은 지난 시절 과도한 정치성으로 채워진 광장의 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의견상, 정치권력에 의한 억압적 동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광장이 갖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인 문화의 공유와 소통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광장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광장의 위상을 획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의 광장들은 지난 시절과는 또 다른 의미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광장이 정치권력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민주적 개방성의 측면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개방성의 균형을 상실했다면 현재의 광장은 일상적 여가와 문화 그리고 소통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과거의 광장이 정치성의 과잉 속에서 권력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현재의 광장은 일상과 문화의 향유라는 관점에 사로잡혀 정치적 기능, 특히 정치적 공론의 기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8월 3일에 광화문광장에서 발생한 한 사건, 즉 광장 관리를 위한 서울시 '조례'의 폐기를 주장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30여분 만에 경찰력에 의해 강제 해산된 사건(한겨레신문 2009/08/13, 8)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예다.

광화문광장은 비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개방'이라는 의미에 부합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개방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광화문광장의 또 다른 기능적 불균형을 본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에 대한 비판적 논리들(박경신 2009; 정윤수 2009)은<sup>2)</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비판들은 결국,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 모든

집단적 행위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 태동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광화문광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여가와 문화의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공론의 기능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속에는 정치권력의 논리가 은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사실이 맞다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은 본질적으로 지난 시절의 광장의 정치적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울시는 정치적 공론의 기능이 사라진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장의 철학적·법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및 현대적 성격과도 양립할 수 없다. 광화문광장의 역사적·현대적 본질은 그곳이 정치적이라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광화문광장에 은폐되어 있는 권력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적 지식으로서 광화문광장에 각인되어 있는 정치권력의 양상들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하고자 한다.

---

2) 박경신의 비판을 살펴보자. 그는 광장에 대한 철학적, 법률적 성찰을 통해 시민들에 의한 광화문광장의 정치적 이용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광화문광장 조례에 명시된 '허가제'의 논리를 검토한다.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란 모든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광장 조례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모든 공적 소유물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표자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그에겐 그 사용범위와 내용을 정할 권한이 있다. 예컨대, 시청건물은 시장에게 관리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근거는 "광장, 공원, 길거리 등은 공공의 장이며 다른 공공건물이나 시설들과는 다르다"는 논리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경신은 연방 대법원 판례의 예를 들고 있다. 1939년 펜실베이니아 주 저지시의 시장 헤이그가 시내의 공원, 길거리, 공공건물 내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법원은 그러한 행정조치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왜냐하면 "길거리와 공원은 소유자가 누구이든 역사 이전의 시간부터 공공의 사용에 신탁되어 왔고 기억이 아득할 정도로 오랫동안 시민들 간의 집회와 사상의 교환 그리고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거리와 공공장소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광화문광장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 2. 광화문광장과 정치권력의 재현: 역사적 사례들

### 1) 식민권력과 광화문광장: 제국주의적 권위의 표상

1910년 9월 30일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처음에는 통감부 건물을 사용했지만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원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총독부 건물의 필요성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총독은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총독부 신청사 건립 문제에 접근하지는 않았다. 그는 식민지배의 상징적 차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총독부 신청사는 조선왕조의 멸망을 가시화하고 식민 권력의 존재와 위엄을 표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총독의 구상이었다(이규복 2002, 118). 적절한 공간은 왕조권력의 부흥을 꿈꾸는 흥선대원군이 증건한 경복궁 내부였다. 총독부 청사는 궁의 중심인 근정전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복궁은 철저하게 파괴되는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신 르네상스식의 거대한 석조건물(강지선 1994)에 압도된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멸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형상이다. 그렇지만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전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을 없애는 일이 남아 있었다. 총독부 신청사의 정문으로 이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21년 5월 광화문을 헐어버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동아일보 1921/05/24)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일제의 반문명적 행위를 비판하고 공격했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은식(박은식 1972, 182), 예술이론가이자 사상가인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야나기 2002, 196-205) 그리고 와세다 대학 교수였던 이마와지로(손정목 1989, 90) 등이 그러했다. 반대 여론에 부딪힌 총독부는 결국 광화문을 이축하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 1924/10/05). 광화문이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 옆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여론을 무릅쓰가면서

그리고 이만일천 명의 노동력을 동원해가면서 광화문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던 필연적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광화문 해체와 이축은 총독부의 새로운 정문을 세우기 위한 사전적 작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조선왕조의 도읍 한양을 식민권력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거대한 상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김백영 2006, 272-273). 조사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청사는 경복궁의 중심축과 일치하지 않는다(문화체육부·국립중앙박물관 1997, 58-59). 경복궁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약 5.6° 틀어져 지어졌으며 “원래의 자리보다 약간 뒤로” 물러난 그 정문 또한 광화문의 터를 기준으로 약 3.5° 동쪽으로 틀어져 있다(유길상 2007, 89-91). 이러한 배치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조선왕조의 도읍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축선이 아니라 자신들이 축조하고자 했던 식민도시 경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축선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총독부청사 신영지』는 “새 청사를 짓는 위치를 경복궁이나 광화문의 중심선과 맞추게 되면 정면도로의 중심선과 어긋나게 됨으로써 그 위용을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일제는 식민도시 건설의 기초적 작업으로 닦은 새로운 도로인 태평통(太平通), 즉 “정면도로”를 기준으로 총독부 신청사를 세웠다(조선총독부청사 신영지 1995). 아울러, 새로운 축선의 형성은 일제가 1925년에 남산에 건립한 조선신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공간적으로 볼 때 조선총독부는 태평통을 통해 조선신궁과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결국 식민지배의 정치적 중심과 종교적 중심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권력의지의 발현이며 그러한 상징적 공간화라는 맥락에서 광화문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했던 것이다. 일제는 그 과정에서, 광화문과 더불어 왕조의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던 육조대로를 광화문통으로 명칭변경하고 대로의 양편에 늘어서 있던 중앙관아들을 총독부의 행정기관으로 사용했다. 이렇듯 육조대로, 즉 지금의 광화문광장은 식민권력의 존재와 위엄을 가시화하는 건물들로 둘러싸여 제국주의적 권위가 표상되는 공간으로 변질되기에 이른다.



다(홍순민 2004, 26-27).

## 2) 박정희와 광화문광장: 근대화와 민족주의의 공간적 표상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박정희 군부권력은 광화문광장의 권력적 이용을 새롭게 시도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복궁 정면에 광화문을 다시 세운 일이다. 일제가 이축한 광화문은 6·25 전쟁의 폭격으로 석축만 앙상하게 남은 채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져 갔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광화문은 목재가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를 재료로 건립되었다. 현대적 재료를 이용한 광화문 건립이 처음부터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울시와 문화재관리국 사이에 건축 재료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 철근-콘크리트로 건립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맞서 문화재관리국은 목재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967년 11월 7일 서울시장이 광화문 공사를 문화재관리국에 일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사의 책임이 문화재관리국에 부여되었다. 1967년 3월에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해 1968년 12월에 완공했다. 노동력 12만 8천 25명이 동원되어 총 길이 88.6m, 높이 15.4m, 무게 7천t의 거대한 철근-콘크리트 광화문이 탄생했다. 그렇다면 문화재관리국은 목재 광화문을 건립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한 기사에 따르면, 설계상 목재로 지어진 광화문은 엄청난 교통량에 따른 진동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한국일보 1968/03/19). 그 주장은 결국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광화문 재건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논리지만, 목재로 지어야 한다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여론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조선일보 1968/11/09; 길윤형 2007) 목재 광화문이 결코 무모하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추론하게 된다. 언론은 철근-콘크리트 광화문 건립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도하고 있다(조선일보 1968/12/12).

그렇다면 박정희는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 경제적 비용을 들 수도 있지만, 문화재관리국이 제시한 목재 광화문 건립비가 철근-콘크리트 광화문 건립비보다 더 적게 든다는 면에서는 (조선일보 1967/11/06)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는 광화문 건립을 식민통치를 상징하는 석조건물, 즉 중앙청을 제압하는 상징적 작업으로 해석했는데(조선일보 1967/11/06), 이러한 관점이 광화문의 건립과 관련된 최고 권력자의 결정을 이해하는 데 더 적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화문의 주재료인 철근과 콘크리트는 박정희 정권이 주창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호다. 박정희 정권은 망각 속에 간직되고 있던 폐허의 광화문을 ‘신속하게’ 재건했다. 그것은 퇴영과 패배의 역사를 극복하고 근대화를 향해 전진하는 민족의 미래를 이끄는 군부엘리트의 정치적 지도력의 표상이다. 아울러 권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광화문은 중앙청을 가로막는 형상을 통해 민족적 주체 의식을 가시화하고 있다. 광화문 준공식을 보도한 <대한뉴스>는 재건된 광화문을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먼 후손들의 손으로 탄생(e영상역사관, 대한뉴스 705호)” 한 것으로 규정했다. 결국, 광화문은 조국근대화, 경제성장, 민족중흥의 이념과 그러한 이념들을 구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군부권력의 존재를 보고 느끼게 하는 의미체로 탄생한 것이다.

광화문의 권력적 상징성은 세종로의 상징화 작업과 결합하면서 한층 더 그 의미의 증폭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육조대로, 광화문통으로 불리던 거리가 해방 후에는 세종로로 명명된다. 세종로의 도로 폭은 1950년대에 지금과 같은 규모(1백 미터)로 확장되었지만, 그 거리가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60년대 들어서였다. 세종로는 서울의 다른 거리들과 마찬가지로 조국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기호들로 조형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광화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목표를 추진해나가는 정치권력의 의지를 재현해주는 상징물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교통망의 근대화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가장 넓은 도로 또한 전통성을 탈피해나갔다. 전차가 사라진 도로를 차량들이 채워나갔다. 또한 차량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

을 위해 광화문을 횡으로 관통하는 지하보도가 건설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641). 세종로는 그야말로 근대화와 성장의 거리로 변모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광화문의 건립은 세종로 공간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된 공사였다.

근대화의 의미로 채색된 세종로의 중심에는 이순신 장군상이 세워졌다. 동상은 국가적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조상을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첫 작품으로 1968년 4월에 제막되었으며 헌납자는 박정희였다(정호기 2007). 그 사실과 더불어, 박정희가 제작자의 작업실을 두 번이나 들러 살펴봤다는 점(박계리 2004, 164) 그가 이순신 장군상에 보인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박정희에게서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권력 정당성을 확고히 해줄 중요한 상징적 매개물이었다. 그는 이순신 장군 탄신일 행사에 14차레나 참석한 것을 필두로 이순신 장군의 영웅화 또는 신격화를 위한 문화사업의 추진에 전력을 기울였다(전재호 1998, 248-250). 그러한 정치적 의지가 세종로의 충무공상을 통해 재현되었다. 박정희는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 상을 서울의 중심거리에 세움으로써 자신을 구국의 지도자로 이미지화하고(최연식 2007, 57) 더불어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이념의 정당성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충무공동상의 제작에 대해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제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는 충무공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까. 조국과 겨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충무공의 정신은 천추만대에 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민족의 얼이요 정기인 것입니다. 조국을 지키면서 건설하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는 우리의 정신도 곧 충무공의 정신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상을 가진 우리는 위대한 후손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날 우리가 추진하는 조국 근대화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민족적 대열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참여해

서 힘차게 전진합시다(박정희 1969, 156).

콘크리트 광화문과 충무공상이 각각 시작점과 끝점을 차지하고 있는 1960년대 세종로는 박정희 군부권력의 정치적 존재성과 이념이 일상적으로 재현되는 상징적 장소였다. 이렇듯 1960년대 세종로에서는 지난 시절 바로 그곳에서 전개된, 공간의 권력적 이용법이 다시 재현되고 있었다.

### 3) 김영삼 문민권력과 광화문광장: 신한국 이데올로기의 시각적 재현

1960년대 조국근대화의 물결이 몰아치면서 세종로 또한 국가적 이념과 가치를 표상하는 장소로 구축되고 사람들의 보행이 불가능해진, 차량들의 배타적 무대로 용도 변경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광화문광장은 새로운 정치적 기억을 간직하게 된다. 그것은 김영삼 문민정부가 추진한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역사적 정통성 회복의 관점에서 1995년 광복절을 기해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해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여론을<sup>3)</sup> 돌파해야 했다. 1995년 3·1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선포식”을 개최한 후 정부는 8월 15일 세종로에서 총독부 건물의 첩담을 제거하는 국민적 의식을 거행했다.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는 명백히 역사적 정통성의 복원을 지향하는 상징적 행위였지만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었다. 당시 경축식은 “광복의 힘찬 함성 신한국의 원동력”, “민족정기 회복하여 통일로 미래로”라는 표어를 내걸었는데 주지하다시피 ‘신한국’은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통치이념이었다. 문민권력은 민족주의적 의례를 자신의 통치이념과 연결하면서 권력의 역사적 위상을 확립하고

3) “역사바로세우기 속 역사지우기(안창모 2005b, 344)”란 역설적 표현이 반대여론의 논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했다.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첩탑 제거를 위한 고유제에서 낭독된 고유문은 그러한 의미의 연결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리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말살하고  
거례의 생존까지도 박탈했던 식민정책의 본산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여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통일과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정궁 복원작업과 새 문화거리 건설을  
오늘부터 시작함을 엄숙히 고합니다

(문화체육부 · 국립중앙박물관 1997, 354)

이렇듯 총독부 건물 철거로 가시화된 신한국 건설의 메시지는 세종로 앞에서도 재현되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렸다. 전통의장대와 전통군악대의 선도로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 해외동포, 일반 시민 등 5만여 명의 참석자들이 광화문 앞 도로에 집결하고, 전통 군악대의 연주로 시작된 식전행사에서 광복의 환희를 재현하는 500여 명의 매투군, 비라군, 햇불수의 합주와 행진이 진행되었으며, 총독부 건물 첩탑이 제거된 후에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축가와 연주가 그 뒤를 잇고, 독립유공자 표창 후에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했다.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으로 본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식후행사가 이어졌다. 천안에서 발화한 불꽃이 통일성화봉송단에 의해 식장을 통과하고 대통령에 의해 건네진 성화가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통일 판타지 연주와 통일의 염원을 표현하는 무용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광화문대로의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커다란 맴돌이를 하면서 행사의 대미가 장식되었다(한국일보 1995/08/02; 문화방송 뉴스테스크 1995/08/015).

국민적 행사가 치러진 세종로, 즉 광화문광장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에 의해 조형된 공간과의 철저한 의미의 단절을 보여준다. 박정희가 주조한 세종로는 권위주의 권력의 존재 그리고 근대화 민족주의와 같은 국가적 이념의 표상공간이었다. 시민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적으로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민권력은 역으로 그 공간이 시민적 개방성을 갖는 광장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꿈꾸도록 한 세종로의 축제는 명백히 과거의 권력과의 단절을 가시화하는 것이며, 새로운 권력의 존재와 그 이념을 인지하도록 하는 행사였다.

### 3.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권력적 관점을 통한 접근

#### 1) 광화문광장 조성의 관점: “도시는 상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서울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갖추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오세훈 2006).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강조는 서울시장이 서울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도시를 구매력 있는 ‘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라는 상품의 구매력은 이미지에 의해 촉진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장이 『대한건축학회 회지』에서 밝힌 도시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이제 도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유통되는 상품이 됐습니다. 도시가 잘 팔려야 나라가 부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있는 도시는 날개 돌친 듯 팔리고 그렇지 않은 도시는 진열장에 나와 보지도 못한 채 창고 속에 재고품처럼 박혀 있습

니다. [...] 우리 서울도 이제 디자인을 매개로 문화와 경제를 통합해  
격조 높고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즉 창의적인 디  
자인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서울  
경제를 진흥시켜야 한다는 것이 도시 디자인의 기본 방향입니다(오세  
훈 2007a).

서울이라는 상품의 구매력을 창출하는 브랜드는 디자인을 매개로 만  
들어지는 것이다. 디자인은 상품의 매력적 외관을 구성해내기 위한 이미지  
들의 조합이다. 디자인을 통한 서울 고유의 브랜드 가치 창출이야말로 시  
장이 취입사를 통해 밝힌, 문화도시 서울을 창조하기 위한 동력이다. 문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의 도심을 독특하고, 화려하  
고, 매력적인, 말하자면 상품성 있는 장소로 만드는 디자인 작업이 요구된  
다. 상품가치를 지닌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  
원이 있다면 그것은 전통문화와 유산이다.

세계 선진도시들은 어디를 가나 상징 가로가 존재합니다. [...] 우리  
서울도 이제는 그러한 상징 가로를 비롯해 서울만의 품격 있는 문화와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울로 사람과 돈이 모이게  
만들 수 있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  
해서는 우리만의 전통문화와 유산을 복원하는 일이 반드시 전제되어  
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세계적  
인 문화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세종로가 참  
으로 귀한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오세훈 2007b).

광화문은 한강, 남대문, 동대문, 청계천 등과 함께 서울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자산(김형국 2002, 45)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영역자산을 광범위하게 동원함으로써 서울의 대표

적인 랜드 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높은 상품성을 지니는 도시 서울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다. 도시에 대한 서울시장의 관점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광화문 주변 공간, 즉 세종로를 광장으로 만드는 사업은 본래 <경복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일제가 철저히 파괴해버린 경복궁을 원래대로 만드는 대역사는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에 기획되고 구체화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6월 5일 <경복궁 복원 기공식>에서 사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숨결과 우리들 선조의 일이 서린 민족문화의 유산을 그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3년 후, 1994년이 되면 서울은 수도 600주년을 맞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가 이곳에 도읍을 정한 이래 지난 600년에 걸쳐서 수도 서울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시대에 수난의 역사 속에서 헐리고 변형된 이 조선 왕조의 정궁이 앞으로 십년간에 걸친 공사로 그 옛날의 수려한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국립영화제작소 1991).

대통령은 10년의 공기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그 사업은 총공사비 1789억원을 들여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년 동안 진행될 것이었다. 사업은 총 5단계로 구분된다(문화재청 2003a, 4).

다음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5단계 사업에는 광화문 주변의 복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문화재청 2003a, 7). 1994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러한 복원사업 프로그램에 맞추어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이라는 사업명 아래에서 세종로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안을 발표했다. 광화문 앞의 옛 모습이 재현되고 시민들의 보행권이 보장되는 '광화문광장'을 만든다



〈표 1〉 경복궁 복원사업 계획

구분	복원사업내용	사업기간
1단계	침전 권역: 강녕전 등 12동 794평 복원	1990~1995
2단계	동궁 권역: 지선당 등 18동 352평 복원	1994~999
3단계	흥례문 권역(박물관): 흥례문 등 517평 복원,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등	1996~2001
4단계	태원전 권역: 태원전 등 25동 496평 복원, 구 30경비단 철거 후 경복궁 지형복구 등	1997~2004
5단계	광화문 및 기타 권역: 광화문 등 32동 1,091평 복원, 광화문의 원위치 복원 및 훼손 변형된 유적 복원	2001~2009

는 것이었다(이찬배 2003, 39). 이후 문화재청의 주도로 2003년 7월 8일, ‘경복궁 광화문 권역 복원정비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광화문 권역 복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되고 점검되었다. 공청회 개최 결과를 참고하면,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협력을 통해 조선왕조 육조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다(문화재청 2003b).

이러한 개념도 아래에서 준비된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2007년 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12월 27일의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가 지난 10여 년간 연구, 검토해 온 세종로 일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마침내 2007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시민 고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아시다시피 세종로 일대는 북악산과 조선 정궁인 경복궁, 광화문 전면의 육조거리가 있는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 곳이자 2002년 월드컵 응원의 함성과 광복 60주년의 감격이 울려 퍼졌던 뜻

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세종로는 수많은 차량들에게 그 자리를 내준 채,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역사문화 중심축으로서의 세종로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천만 서울시민 고객들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승례문에서 청계천, 세종로로 이어지는 거리를 편안하게 보행하여 역사 유적과 도심 속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오세훈 2007b).

서울시는 2007년 3월,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그해 12월에 설계안을 확정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서울시가 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서울 도심을 전체적으로 재편성하는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는 점이다. 2007년 11월 2일에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서울시장은 개회사에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본질적 성격을 말했다. 그것은 “낙후된 서울 도심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찾아내서 서울을 매력적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은 서울 도심을 네 축으로 나누어 각 축을 특정한 테마 공간들로 구성하는 것이다(오세훈 2007c). 이러한 아이디어는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의 주관으로 만들어진 「서울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속에서 현실화되었다.

“도심의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 “도심 경제 활력 강화”, “창조적 미래형 도시 추구”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는 서울시장이 국제포럼에서 밝힌 바대로 서울 도심을 역사문화축, 관광문화축, 녹지문화축, 복합문화축으로 구분하고 각 축을 특색에 맞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각 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역사문화축은 세 개의 테마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으로서 세종로에 폭 100m, 길이 740m의 광장을 조성한다. ②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 사업으로서 폭 10m, 길이

300m의 공간을 대상으로 “음식 문화 및 유흥 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가로 조성 및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자 한다. ③남대문 재래시장을 정비해 쇼핑과 관광의 명소로 만드는 사업이다.

둘째, 관광문화축의 경우 세 개의 테마 공간으로 조성된다. ①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품격 있는 명동거리를 조성”한다. ②명동-을지로 2가 첨단 유비쿼터스 가로 조성 사업으로서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형한다. ③낙원상가 정비 사업을 통해 고층건물들의 이전을 통해 북촌과 남산을 잇는 조망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창경궁, 종묘-남산을 녹지로 연결해 남북 그린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한 녹지문화축은 세 개의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①세운상가 일대 낙후지역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 ②창경궁-종묘 사이를 녹지화하는 창경궁-종묘 간 단절구간 복원 사업 ③퇴계로-남산 간 녹지 연결 사업이다.

넷째, 복합문화축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문화, 공연문화, 패션문화가 함께 하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며 다음의 다섯 개 사업들로 구성된다. ①동대문 디자인 파크 조성 사업으로서 “역사와 문화, 녹지 등이 어우러진 다목적 시민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건립해 프랑스 풍피두센터에 버금가는 문화 랜드 마크를 조성하고자 한다. ③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6개의 간이야구장을 건립한다. ④홍인지문 주변에 역사녹지광장을 조성한다. ⑤대학로-동대문운동장-남산을 잇는 도로의 교차로를 개선하고 고가를 철거함으로써 보행체계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네 개의 도심축 조성에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이 더해져 서울시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전체적 틀이 구축되었다(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2008).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도심의 역사문화축 조성 사업 속에 편성되어

있다. 그것은 결국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의 근본적 의미가 달라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업 목표를 지향한다. 첫째, “세종로 중앙에 육조거리 복원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광장 조성”이며, 둘째 “경복궁,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자연경관 조망 축 확보”하는 것이며, 셋째 “첨단 I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보행 공간 확보로 관광명소화”의 구축이다(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2008, 9). 표면적으로 보자면 사업의 목표는 역사와 전망과 관광이라는 세 개의 가치의 균형적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안과 실제 조성된 광장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서울시는 본래 2008년 2월에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자 했지만 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져(서울신문, 한국일보 2008/01/21) 같은 해 5월 27일에야 착공식을 열어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고, 2009년 8월 1일에 시민들에게 광장을 개방했다. 길이 740m, 폭 34m의 광화문광장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4개의 테마 존으로 개념화되고 6개의 주제 광장들로 조성되었다. ‘경복궁 역사회복의 존’, ‘조망 및 역사재현의 존’, ‘문화의 존’, ‘도시의 존’ 이 4개의 테마 존이라면, 6개의 주제광장은 각각 ‘광화문의 역사를 회복하는 광장’, ‘육조거리의 풍경을 재현하는 광장’, ‘한국의 대표 광장’,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문화 광장’, ‘도심 속 광장’, ‘청계천 연결부’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광장은 해태상, 노두석, 육조 표석 등과 같은 상징물들로 장식되어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재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의 대표 광장’은 세종대왕 동상을 세워 역사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첨단기술들로 이루어진 장치들을 설치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비전을 시각화한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이른바 ‘sunken 광장’의 형태를 갖춘 ‘도시문화광장’은 시민들의 교류와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할 것이며, 충무공동상을 중심으로 구성될 ‘도심 속 광장’과 ‘청계천 연결부’는 역사와 스펙터클의 시각적 조합을 특징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2009; 조선일보 2007/12/13; 연합뉴스 2007/12/13).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시는 광장 조성 목표들 중의 하나가 ‘육조거리의 복원’에 있다고 하면서 복원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렇지만 완공된 광화문광장은 그러한 역사성을 실질적으로 담아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광화문광장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육조거리의 모습의 철저하고 엄격한 고층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조선조에서 가장 정치적이었던 공간에 관한 단편적 기억들을 연상시키는 시각적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으며 그러한 이미지를 조차 첨단 디지털 기술들과 결합되어 역사성보다는 감각적인 스펙터클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결코 역사의 복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경복궁과 광화문이 적어도 고종 조에 중건된 모습에 가깝게 복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자면 이러한 형태의 광장 조성은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의 본질은 광화문광장 조성이 경복궁 복원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도심 재창조 사업으로 성격 규정되었다는 데에 있다. 도심을 매력적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정책적 관점에서 광화문광장은 복원의 대상이 아니라 재창조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역사를 이용한 스펙터클의 광장이 조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복원이 아니라 재창조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일까? 서울시장은 사람들이 역사와 자연의 정취를 느끼면서 편안하게 도심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광장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지 일상의 여가와 휴식의 기능만을 위해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것일까? 서울을 문화관광의 도시로 근본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서울시장의 정책적 포부가 광화문광장에 투영되고 있다면 그 광장은 정치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광화문광장과 권력의 새로운 논리

정치권력의 속성은 지배를 위한 자본의 획득을 넘어 피치자를 향해 자신의 힘과 권위를 보여주는 데 있다. 권력이란 상징적인 것임을 뜻한다 (Balandier 1992, 16). 이러한 관점에 서게 되면 권력행위는 일종의 연극에 비유될 수 있다.

연극정치에서 가장 빈번하게 강조되는 것은 영웅의 신화다. 이 신화는 놀랄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평범할 수밖에 없는 권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눈부신 권위를 창출해낸다. 영웅은 일상적인 권위의 존재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는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로 나타난다. [...] 그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요소들이 아니라 그가 행사하는 연극적 힘에 의해 승인된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고 행동하며 자신에 대한 신봉을 촉구하면서 권력을 부여받는다. 놀라움, 행동, 성공은 영웅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연극의 세 법칙이다(Balandier 1992, 17).

이러한 연극정치적 비유는 공적 공간을 무대로 권력의 존재와 가치를 보여주하고자 했던 지난날의 광화문광장의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제 식민권력은 광화문광장 앞에 웅장하고 화려한 총독부 건물을 세움으로써 ‘화려하고 눈부신 권위’를 창출하고자 했으며, 박정희 군부권력은 광화문을 다시 세우고 그 앞의 공간을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표상하는 상징물들로 채움으로써 정치적 ‘능력’을 과시하고자 했으며, 김영삼 문민권력은 일제가 건립한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적 축제를 거행함으로써 ‘놀라움’과 ‘성공’이라는 정치적 영웅성의 요소들을 주조해내고자 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연극에 동원된 대상물들에는 권력적 색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속에서는 권력의 논리와 의지가 은폐되어 있기보다는 뚜렷한 방식으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웅대한 총독부 건물의 외관이 그러하며 광화문과 충무공

동상이 그러하며, 또한 총독부 건물 해체의 스펙터클이 그러하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서울시가 조성한 광화문광장에는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대상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가 건립한 광화문광장에는 권력의 의지를 인지할 수 있는 뚜렷한 정치적 표상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곳은 그저 지난 역사의 단편적 이미지들, 일상적 휴식과 여가의 도구들,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첨단 기술들, 그리고 감각을 자극하는 화려한 스펙터클—예컨대 분수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정치권력의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비정치적인 것으로 보이는 문화적 대상물들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권력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프랑스의 사례 하나를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1980년대 미테랑 대통령이 구상하고 추진한 대역사(Grands Travaux)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파리 도심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이른바 대역사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사업의 주창자는 미테랑(F. Mitterand) 대통령이었다. 그는 1982년 3월 8일 「대규모 건축 및 도시 계획사업에 관한 대통령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요청으로 준비되고 연구되었음을(P. Poirrier 2002, 388) 알려주는 성명서 전문이 말해주듯이 대역사는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대역사를 통해 파리는 문화, 예술, 과학, 학문의 세계를 표상하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가진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예컨대,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1986년 완공), 아랍세계연구소(Institut du Monde Arabe, 1987),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Opéra Bastille, 1989), 루브르 박물관(Grand Louvre, 1995),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997)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테랑 대통령은 대역사를 밀고 나갔다. 외견상 그것은 파리 시민과 프랑스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미테랑은 “교양

있는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길 바라마지 않았던 대통령이었다(P. Poirrier 2000, 177). 여기서 우리는 미테랑이 주도한 대역사를 단순히 문화적 차원이 아니라 권력의 차원에서 바라볼 가능성을 만나게 된다. 미테랑은 문화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 스스로 구상하고 기획한 대역사는 루브르와 라테팡스 개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oirrier 2000, 179).

그렇다면 미테랑은 어떠한 정치적 구상과 기획 속에서 그 두 건축 사업을 이끌어 나갔을까? 루브르 박물관 사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한 연구자에 따르면 루브르는 “언제나 권력의 장소”였다(Riguaud 1995, 21). 그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이 외견에서는 순수한 문화적 공간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그곳은 언제나 문화적 임무와 정치적 임무가 동시에 실천되는 공간이었다. 그것은 미테랑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루브르의 유리피라미드를 건축한 페이(Ieoh Ming Pei)에 따르면 그 구조물은 “구시대 건축 전통과의 단절(i. m. pei 2005)”을 함축한다.

건축은 중대한 정치적 가치와 의미, 예컨대 권위, 존엄, 능력, 창조성, 차이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는 논리(Edelman 1995, 73)에 입각하자면 미테랑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유리피라미드 건립을 밀고나간(Mollard 1999, 267-269) 근본적 동인은 1981년 5월에 탄생한 사회당 정부와 그 정부를 이끄는 자신을 구시대와의 단절과 정치적 새로움이라는 가치로 표상하기 위한 정치적 욕구에 있는 것이다(하상복 2005, 299).

우리는 여기서 미테랑 대통령의 사례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에 기계적으로 대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시도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테랑 대통령의 권력정치에는 광화문광장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테랑 대통령은 파리 시민들과 프랑스 국민들이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했다. 그런데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상을 아우르는 문화적 스펙터클을 매개로 권력의 존재와 가치



를 가시화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논의를 더 밀고나가자면 미테랑의 대역사는 파리에 새로운 차원의 지역 헤게모니를 부여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에서 파리는 전통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등 제반의 영역에서 지역적 헤게모니를 장악해왔다. 하지만 사회당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화 속에서 그 전통적 헤게모니가 점차적으로 약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파리는 새로운 문화적 장관들을 보유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역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건립한 광화문광장은 또한 명백히 비정치적인 문화적 대상 물들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권력의 새로운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을 브랜드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조형해내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프로젝트의 완성은 곧 그것을 기획하고 추진한 정치적 주체의 존재와 영웅적 능력을 보여주는 연극정치인 것이다. 지난 시절의 정치권력과는 달리 유연하고 세련되며 교양을 갖춘 정치적 인격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은 단순히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일상적 여가와 문화의 소비 공간인 것만은 아니다. 그곳은 1995년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속에서 서울이 보다 견고하게 지역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정치적 전략이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끊임없이 서울을 모방해 왔고 이제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위한 광장 또한 다른 지역들로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들이 서울이 지닌 지역적 헤게모니를 잠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모방은 문화적 힘과 영향력을 지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은 이른바 “지역의 문화정치”의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전규찬 1999, 163).

## 4. 광화문광장의 본질: 정치적 소통과 참여의 공간

### 1)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의미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제정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장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제3조 관리).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다면 광화문광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제장치들을 조례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먼저 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sup>4)</sup>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조례 제6조). 위에서 말한 “다음 각 호 사항”이란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광장 사용 여부가 전적으로 시장의 독자적인 결정권에 속하도록 했다. 더욱이 조례 제8조(허가사항 변경)와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는 광장 사용이 허가된 경우에도 시장의 발의와 결정에 의해 허가사항

4) 허가신청서는 행사명칭,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와 책임자의 신상은 물론이거니와 사용인원과 면적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을 변경하고 취소하며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곧 광화문광장의 개방성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소통과 참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광화문광장에 대한 서울시의 이러한 인식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리는 그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원형을 추적해 그곳이 정치적 의사소통의 공간이었음을 밝히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화과정 속에서 광화문광장이 수행해온 정치적 역할을 밝힘으로써 그곳이 정치적 참여의 공간임을 제시하는 일이다.

## 2) 광장의 역사적 원형: 통치자와 피치자의 정치적 의사소통

서울시가 조성한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태조로부터 세종에 이르는 조선왕조 창업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태조가 한양을 신왕조의 도읍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도전을 비롯한 신료들이 새로운 도읍의 설계도를 작성을 위해 그곳으로 파견되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도 군주권력을 상징하는 왕궁의 건설일 것이다. <신도궁궐조성도감>의 지휘로 공사가 시작되어 1395년 9월 29일에 경복궁이 완공되었다. 경복궁은 남쪽을 향해 자리하고 있고, 궁의 동쪽에는 종묘가, 서쪽에는 사직단이 배치되었다. ‘남면(南面)’과 ‘좌묘우사(左廟右社)’라는 유교적 통치의 공간적 원칙이 존중되었다(태조실록 3년 9월 9일 병오). 총 390여 칸의 규모로 건립된 경복궁 앞은 의정부와 육조 관아들이 늘어난 거리로 조성되었다. 왕궁의 앞에는 조정(朝廷)을 세운다는, 중국 고대의 궁궐조형원리(前朝後市)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의 정치적 중심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종이 도읍을 개경으로 옮기고, 태종 또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 한양으로 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경복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궁궐인 창덕궁을 지어 그곳에서 정사를 돌봄에 따라 경복궁과 육조대로

는 점차적으로 퇴락해갔다. 경복궁과 육조대로가 다시 왕조의 중심으로 설 수 있게 한 이는 세종이었다. 세종은 아버지와는 달리 경복궁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즉위식을 그곳에서 거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위 8년째부터 경복궁으로 이어했다(김동욱 1999, 97). 세종은 경복궁을 왕조의 정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재위 9년째부터 25년째에 이르는 16년간 중수공사를 기획하고 완성했다(김동욱 2002, 131). 경복궁이 4대문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었던 그는 재위 15년 7월에 북문인 신무문을 지어 4대문을 완성하고(세종실록 15년 7월 21일 임신) 공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미리 각 문의 명칭을 정하도록 명령했다(세종실록 8년 10월 26일 병술). 건춘문, 영추문, 신무문과 함께 남쪽문의 이름이 광화문(光化門, 군주의 덕과 교화가 만방에 미친다)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부왕과는 달리 경복궁을 왕조의 정치적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자 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세종의 통치이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태종이 군주에게 절대적 권한이 부여되는 강력한 왕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반면에 세종은 군주와 신하 간의 합정(合政)을 통치의 이상으로 삼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즉위한 해에 이루어진, 신료들과의 합의를 통한 인사(세종실록 즉위년 8월 12일 기축), 군주와 신하 간의 자유롭게 대등하며 개방적인 정치적 의사소통의 요구(세종실록 5년 7월 3일; 7년 12월 8일) 등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지만, 무엇보다 세종 18년(1436) 4월에 단행된 육조직계로부터 의정부서사제로 전환은 군신의 합의를 통한 통치 이상이 가장 명확하게 표출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태조께서 제정하여 놓으신 법에 의하여 육조에서는 각각 맡은 직무를 먼저의 정부에 품의(稟議)하고, 의정부에서는 가부를 의논하여 아뢴 뒤에 분부를 받아서 도로 육조로 돌려보내서 시행하게 하고, 오직 이조와 병조에서의 관리 제수나, 병조에서 군사를 쓰는 것과, 형

조에서 사형수 이외의 형결은 해당 조로 하여금 직접 아뢰어서 시행하게 하고 즉시 정부에 보고하여, 만일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반대하고 다시 계문해서 시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던 거의 옛날 재상에게 전임(專任)하는 본의에 합당할 것이니, 예조에서는 중외에 밝게 알리라(세종실록 18년 4월 12일 무신).

합의를 통한 통치를 실천한다는 세종의 의지는 백성들에게로까지 확장되었다. 조세제도의 개혁을 위해 신료들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묻고자 했던 경우(세종실록 12년 8월 10일 무인; 최승희 2007, 193)와, 병 치료차 방문한 지역의 관리가 백성들의 민원을 우려해 왕과의 접촉을 차단하고자 했을 때 보인 세종의 신랄한 비판(세종실록 26년 5월 5일) 등은 그러한 정치적 의지의 단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군신협치제는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이상으로 삼은 통치원리였다. 정도전이 내세운 ‘재상정치론’, 즉 “국왕을 상징적 존재로 국한시켜서 그에 주어진 권한을 ‘재상을 선택하는’ 것과 재상과 ‘정사를 협의, 결정’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재상을 실질적인 정치의 권한을 가진 존재로 부각시켜서 정책결정권자로 삼아 재상을 정점으로 한 정치제도”(정재훈 2005, 71)는 군신협치제의 구체화였다. 정도전이 주창한 군신협치제의 원리는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과 육조대로에서 시각적으로 재현되었다. 정도전은 도성과 왕궁 조형원리를 담고 있는 중국 고대 유교경전인 『주례(周禮)』를 따라 경복궁 조형의 전범으로 삼았다(이강근 2003, 17-18). 『주례』에 따르면 왕궁은 ‘삼문삼조(三門三朝)’를 원리로 건립된다. 남에서 북으로 외조(外朝), 치조(治朝), 연조(燕朝)로 불리는 3조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공간에는 고유한 문(3문)들이 세워진다.

여기서 궁의 제일 남쪽에 자리하는 외조는 왕국의 관료들이 집무하는 관청들이 배치된 공간으로서 『주례』는 이 외조를 3조의 으뜸으로 삼고 있다(賀業鉅 1995, 127). 외조는 “나라 정책을 게시해서 백성들이 보고 알도

록 하며 필요할 때는 이곳에 백성들을 모아 왕이 직접 국가적인 결정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김동욱 2001, 90). 한 건축학자의 논리를 따른다면 경복궁에서 외조는 광화문과 육조대로를 포함하고 있다(주남철 2000, 234). 그렇다면 광화문과 육조대로는 신료들과는 물론이거니와 피치자인 백성들과의 정치적 의사소통이 수행되는, 말하자면 통치가 실천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정도전이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경복궁의 외조에 포함되어 있는 광화문의 정치적 기능을 바라본 것 또한 위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명령과 정교가 반드시 이 문을 통해 나갈 때 살펴서 신실한 뒤에 나가게 하면, 참설(讒說)이 행하지 못하고 거짓이 의탁할 곳이 없을 것이며, 복주(覆奏)하고 복역(復逆)이 반드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니, 살펴서 신실한 뒤에 들어오게 하면 사벽한 것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공적(功績)도 상고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을 닫아 이언(異言)하는 기사(奇邪)한 백성을 끊고, 이 문을 열어 사방의 어진 이를 오게 하는 것, 이 모두가 정(正)의 큰 것이다(정도전 1997 1권, 261).

세종은 통치자와 피치자가 만나는 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서 외조의 기능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광화문 앞의 육조대로에서 피치자들과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은 이상적 유교통치인 예치주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의례인 오례(五禮)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오례 의식을 거행하면서 백성들과 정치적 교류를 시도했는데 광화문과 육조대로는 그러한 정치의식이 이루어진 주요한 장소들 중의 하나였다(김동욱 2008, 36). 이러한 맥락에서 한 연구자는 세종의 통치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왕실의 권위만을 위하여 급급해 오던 단계에서 벗어나 인민대중을 저변으로 하는 조선왕조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권력구조와 조화된 정치력을 얻어야 된다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범직 1988, 113).

요약하자면, 세종의 통치는 군-신-민이 상호교류를 통한 개방적인 방식이었으며, 광화문 앞과 육조대로는 그러한 세종의 통치이상이 구현된 상징적인 정치적 장소였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원형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데에 있었음을,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통치자와 피치자의 정치적 소통기능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군주 시대의 정치적 논리를 현대의 광화문광장의 논리에 대입시키는 것은 명백히 무리이다. 다만 우리는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원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곳을 현대적 의미의 정치적 과정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치적 교류와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형해낼 필요성과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회복과 관련하자면 그 문제는 한층 더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5)</sup>

### 3) 광화문광장의 현대적 성격: 정치적 참여의 공간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역광장, 시청광장과 함께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수렴되고 분출하는 공간이었다. 광화문광장이 최초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의 무대가 된 것은 1960년 4·19 혁명 때였다. 언론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5)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애초에 세종 조에 확립된 육조대로의 정치적 의미를 되살려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선명수·최형탁 2009).

이들 각 대학 학생들은 11시 40분경에 이르러 시청 앞과 의사당 앞에서 완전 합류한 다음 동국대학을 선두로 다시 ‘데모’를 전개, 세종로 중앙청 앞을 돌아 경무대 쪽으로 전진하다가 적선동 파출소 앞에서 경찰의 공포 및 최루탄 발사를 받고 일단 후퇴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적선동, 통인동 쪽으로 ‘코스’를 돌려 마침내 측면에서 국민대학 앞을 돌파 노도처럼 밀려들어 이날 하오 1시 40분경 경무대 어귀까지 돌진하였다(동아일보 1960/04/20).

물론 그 당시의 세종로는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광장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공간이 바로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적 저항이 실천된 곳이었다는 점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적 참여를 위해서는 열리지 않고 있던 거리를 주체적으로 정치적 개방의 공간, 즉 정치적 광장의 의미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산출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전통은 오랜 시간 수면 아래로 잠복되어 있다가 1987년 6월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또 다시 재현되었다.<sup>6)</sup>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진보운동진영에서는 ‘골방에서 광장으로’가 주된 화두가 됐다. 6월 항쟁 이전까지만 해도 진보운동은 비밀리에 학습모임을 꾸리고, [...] 하지만 6월 항쟁을 통해 전혀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거리로 진출한 압도적 다수의 대중투쟁이 수십 명, 많아야 1백여 명의 조직원들로 몇 년에 이룬 이전 운동의 성과를 한 번에 뛰어 넘는 현실을 목격한 것이다(유현상, 2008, 108).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리가 시청과 세종로 일대임은 의문의 여지가

---

6) 그 이전까지 민주화를 위한 시민적 의지는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한된 영역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명동성당’은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 장소이지만 역설적으로 개방된 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없다. 그 공간은 그야말로 탈권위주의 민주화라는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집단적으로 결집하고 표출된 정치적 무대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 연구자는 그 공간을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 장소로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조현연 2001).

한국 시위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촛불시위의 주요한 무대 또한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공간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시위는 2002년 6월에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사망 사건에 대한 시민적 저항으로 시작되어 2003년 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문제제기 속에서 다시 점화되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로 정점에 도달했다. 촛불시위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첫째, 촛불시위는 정치 시스템과 제도에 관한 이슈로부터 일상적 삶의 영역에 관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사회적 사안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시위형식을 창출해내고 있다. 소파(sofa) 개정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전자에 관한 것이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참여의 주체를 확장해내고 있다. 지난 시절 민주화를 둘러싼 정치적 대결과정을 이끌어간 주체는 지식인, 대학생, 전투적 시민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촛불시위는 주부와 중고등학생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셋째, 촛불시위는 이른바 ‘촛불문화제’라는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이기형 2008, 289) 매우 유연한 형태의 시위문화를 창출해내고 있다. 과거의 정치적 참여와 시위가 조직과 전문적 리더십에 지배되고 있었다면 촛불시위는 특정한 시위의 중심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느슨하게 엮인 단체들이 각각 다양한 시위형태들을 시도해가고 있다. 촛불시위에서는 문화적 소통과 정치적 소통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광화문광장으로 조성된 그 공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촛불시위가 실천되고 있었다. 196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속

에서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거부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 실천되는 정치적 개방의 공간으로 조형되기 시작했다면 2000년대 초반의 촛불시위는 광화문광장을 새로운 정치적 개방 공간으로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된다. 그 공간 속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이며 자율적인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모든 정치적 의제들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교환되는 소통의 과정이 실천되고 있으며, 경직되거나 전투적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운동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 세종로 공간이 서울시에 의해 온전한 형식을 갖춘 광화문광장으로 만들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지역권력은 촛불시위에 의해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은 그 광장을 탈정치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시민적 정치참여의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조형되어 온 광화문광장을 ‘조례’라는 형식을 빌려 정치와는 무관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대단히 버거워 보인다. 또한, 시민들의 정치적 소통과 참여의 기능을 광장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시도는, 비록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광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르지만—예컨대, 지난 시절의 권위주의 권력은 비정치적인 용도라고 하더라도 광장의 존재 이유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현재는 적어도 광장의 비정치적 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원형 속에서 그리고 현대사적 과정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정치적 개방성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광화문광장의 의미를 왜곡하는 일로 비춰진다.

## 5. 나오는 말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현대사에서 광장은 대단히 왜곡되어왔다.

그곳은 권력의 과시를 위해 피치자들을 동원해온 역사만 존재했을 뿐, 시민들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신들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표출하는 무대로 이용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우리는 광장을 통한 정치적 소통과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상승해온 이유를 파악하게 된다.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여러 광장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동안 권위주의 권력의 과도한 억압성으로 광장의 존재 자체를 경험할 수 없었던 국민들이 적어도 문화적 차원에서 광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광장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핵심적 사안은 광장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소통과 참여의 기능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제정한 광화문광장 조례는 그러한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서울시가 조성한 광화문광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탈정치적인, 문화와 일상의 공간이라고 규정했지만 그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관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시민적 이용을 부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관점에서 그곳은 정치적인 공간이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원형은 그곳이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정치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공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고, 광화문광장의 현대사는 그곳이 시민들의 민주적 정치참여의 무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광장이 시민들을 위한 정치적 소통과 참여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고려될 법하다. ~~54~~

## 참고문헌

- 강지선. 1994. 「조선총독부 청사의 건축 양식에 관한 연구: 대만 총독부 청사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국립영화제작소. 1991. “경복궁 복원사업에 관한 노태우 대통령 연설.”
- 김동욱. 1999.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2. “조선 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건축역사연구』 11권 4호. 129-142.
- \_\_\_\_\_. 2008. “조선 초기 경복궁의 공간구성과 6조대로.” 『건축역사연구』 17권 4호. 25-42.
- 김백영. 2006. “1920년대 ‘대경성(大京城)계획’을 둘러싼 식민권력의 균열과 갈등,”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59-300.
- 김형국. 2002. 『공간의 문화관측: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길』. 학교재.
- 만쿠조, 프랑코 외 지음. 장택수 외 옮김. 2009. 『광장』. 생각의나무.
- 문화재청. 2003a. 『경복궁 광화문권역 복원정비를 위한 공청회』 (7월).
- \_\_\_\_\_. 2003b. “경복궁 광화문권역 복원정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7월 21일).
- 문화체육부. 1996. 『한국의 지역 축제』.
- 문화체육부·국립중앙박물관. 1997. 『구 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 보고서(상)』.
- 박경신. 2009. “광장과 시청은 다르다.” 『한겨레신문』, 9월 1일.
- 박계리. 2004. “충무공동상과 국가이데올로기.”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2집. 139-175.
- 박은식. 1972. “적이 광화문을 휘감는다.” 『나라사랑』 제8집. 132-133.
- 박정희. 1969. 『박정희 대통령 선집』 (6권: 위대한 조상). 지문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2008. “서울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서울

- 특별시 홈페이지, 균형발전본부 자료실).
- \_\_\_\_\_. 2009.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균형발전본부 자료실).
- 선명수·최형탁. 2009. “광화문광장은 ‘오세훈의 정원 인가?’ 『프레시안』, 8월 3일.
- 손정목. 1989. “조선총독부 청사 및 경성부 청사 건립에 관한 연구.” 『향토서울』 48호. 57-135.
- 안창모. 2005a(2001). “건축.”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1960년대』. 시공사. 389-465.
- \_\_\_\_\_. 2005b(2001). “건축.”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1990년대』. 시공사. 341-395.
- 야나기 무네요시 지음. 심우성 옮김. 2002(1996). 『조선을 생각한다』. 학고재.
- 오세훈. 2006. “서울특별시장 취임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_\_\_\_\_. 2007a. “오세훈 시장이 도시를 말한다.” 『대한건축학회 회지』 4월.
- \_\_\_\_\_. 2007b.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발표 기자 설명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_\_\_\_\_. 2007c.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국제포럼 개최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유길상. 2007. 『세종로의 비밀』. 중앙북스.
- 유현상. 2008. “촛불시위가 진보운동에 던진 교훈: 광장에서 다시 출발하라.” 『민족 21』 88호. 106-109.
- 이강근. 1991. 『한국의 궁궐』. 대원사.
- 이규목. 2002. “서울 근대 도시경관 읽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99-158.
- 이기형. 2008. “촛불시민운동과 ‘넛파워’ 그리고 광장의 정치.” 『문화과 사회』 21권 3호. 288-302.
- 이범직. 1988. 「조선초기의 오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찬배. 2003. “경복궁 광화문권역 복원정비 관련 교통시설 대안 검토.” 문화재청. 『경복궁 광화문권역 복원정비를 위한 공청회』. 26-56.
- 임석재. 2003. 『서양건축사 1—땅과 인간』. 북하우스.

- 전규찬. 1999 (1998). “문화정치.” 정재철 편저. 『문화연구이론』. 한나래.
- 전재호. 1998.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사회과학연구』 7집.
- 정도전. 1997(1977). 『국역 삼봉집 1, 2』. 술.
- 정윤수. 2009. “광화문광장에 광장이 없다니.” 『한겨레신문』, 10월 9일.
- 정호기. 2007. “박정희시대의 ‘동상건립운동’ 과 애국주의.” 『정신문화연구』 30권 1호. 83-106.
- 조현연. 2001. “‘남산’에서 서울시청 앞 분수대 광장까지. 독재에서 민주로 이행한 역사적 현장.” 『월간 말』 7월.
- 주남철. 2000.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최승희. 2007(2002). 『조선 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 최연식. 2007.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집 2호. 43-73.
- 하버마스 J. 지음. 한승완 역. 2004.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 하상복. 2005.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문화정책논총』 제17집. 287-306.
- 홍순민. 2004. “일제의 식민 칩탈과 경복궁 훼손.” 『문명연지』 5집 1호. 5-34.

〈국역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조례 제4880호).

『조선총독부 청사 신영지』(김동현 역. 1995. 국립중앙박물관).

『주례』(지재희 · 이준영 역. 2002. 자유문고).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문화방송 뉴스테스크, 〈대한뉴스〉(e영상역사관, 대한뉴스 705호).

賀業鉅 저 · 윤정숙 역. 1995. 『중국도성제도의 이론』. 이화문화사.

Balandier, G. 1992. *Le Pouvoir sur Scènes*. Paris: Editions Balland.

Edelman, M. 1995. *From Art to Politic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 M. Pei. 2005. "the grand Louvre." [http://www.designboom.com/portrait/pei\\_louvre.html](http://www.designboom.com/portrait/pei_louvre.html)(검색일: 2005-10-23).

Mollard, C. 1999. *Le 5e Pouvoir*. Paris: Armand Colin.

Poirrier, P. 2000. *L'Etat et la Culture en France au xxe Siècle*. Paris: Le Livre de poche.

\_\_\_\_\_. 2002. *Les Politiques Culturelles en Fra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Riguard, J. 1995. *L'Exception Culturelle*. Paris: Bernard Grasset.

투고: 2009.10.5 심사: 2009.10.19 확정: 2009.11.5
--------------------------------------------